

혼인동향과 혼인이행 분석

이 상 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혼인은 한국의 저출산 현상을 설명하는 핵심적 요인이지만, 지금까지 이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와 혼인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 개발은 더디게 이루어져 왔다. 이 연구는 최근의 다양한 혼인동향의 변화와, 개인적 차원에서 혼인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분석한다. 혼인동향에 관한 인구학적 분석은 전반적인 혼인력의 약화와 함께, 혼인연령 규범의 빠른 약화 현상을 보여준다. 이는 혼인이행률의 반등이 없을 경우 국내 출산율이 극도로 낮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한 혼인이행 차별성 분석 결과에서는 경제적 자원 효과가 성별 및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특히 고연령 여성들에게서는 학력, 직업 등과 같은 자신의 자원효과는 약화된 반면, 부모의 자원 효과는 높아졌다. 또한 긴 근로시간은 혼인이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고연령 남성에게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부모로부터의 독립은 고연령 남성을 제외한 모든 집단의 혼인이행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과 독립거주의 영향은 잠재적 파트너를 만날 기회를 높이기 때문에 풀이된다. 이 연구 결과는 한국의 혼인시장의 특성을 보여주고, 혼인지원 정책의 방향성을 제안한다.

주요용어: 혼인이행, 자원효과, 근로시간, 혼인 연령규범, 혼인시장

■ 투고일 2013.7.17 ■ 수정일: 2013.9.3 ■ 게재확정일: 2013.12.16

I. 서론

1. 혼인 연구의 필요성

혼인연령의 증가와 미혼율(never married rate)¹⁾의 증가로 대표되는 우리사회 혼인 경향의 변화는 저출산 현상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우리사회에서는 다양한 경제·사회·문화적 요인으로 인해 혼인을 기피하거나 혼인을 미루는 경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미혼율이 상승하고, 초혼연령이 계속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혼외 출산은 2% 이하로 머무르면서 출산의 절대 다수는 혼인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미혼율의 상승은 출산율의 감소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이삼식 외, 2010). 또한 미혼율의 증가는 혼인을 늦추어 만혼의 경향으로 이어지는데, 만혼의 증가는 부부간 출산 중심의 우리사회에서 여성의 출산 가능기간을 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기혼여성의 출산율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황나미 2007; 김태홍 외, 2011; 변용찬 외, 2010; 김태현 외, 2005; 은기수, 2001).

만혼 및 미혼 증가의 경향은 출산수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수준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도전들을 야기한다. 예를 들어, 만혼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산모 연령의 상승을 증가시키는데, 이는 출생아와 산모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출산과 관련된 질적 수준(출산결과, birth outcomes)을 저해시킨다(홍성훈 외 2002; 박정환 외, 2004; 황나미, 2007; 김상원 외, 2010; 김태홍 외, 2011; Miozzo & Simoni, 2002; 김상미·조영태, 2011). 또한 성인자녀들의 독립 시기를 늦추게 하여 노부모가 젊어져야 할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켜, 이들의 노후준비 자원을 축소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더불어 미혼율의 증가는 평생 미혼으로 살게 되는 미혼노인 단독 가구들의 증가로 이어져 장기적으로는 고독사 등의 새로운 차원의 노인 문제들을 야기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미혼에서 혼인으로의 이행이 촉진되는 것은 사회 전체의 출산율의 문제 뿐만 아니라, 개인과 가족 수준의 생활만족 수준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 미혼에 대해서는 '결혼을 해야한다'는 가치가 담겨져 있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비혼'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하지만, 비혼은 엄밀한 의미에서 무배우(not married)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미혼'이라는 용어가 가진 결혼 의무의 가치를 배제한 채 '결혼한 적이 없음' 혹은 '초혼의 가능성이 있음'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혼인이 갖는 인구학적 중요성에도 우리사회에서 실제적인 혼인을 지원하는 정책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고, 실행되고 있는 정책들도 사실상 결혼을 통해 가족을 형성한 부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미혼에서 결혼으로의 이행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보기에 한계가 있다(이상림 외, 2012).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혼인 동향의 변화와 미혼에서 혼인으로 넘어가는 혼인이행에 관한 심층적 이해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혼인에 관한 국내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대부분의 연구들은 혼인의 경향에 초점을 맞추면서 혼인이행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2. 연구의 목적 및 의의

이 연구는 우리나라 혼인동향을 인구학적 관점에서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혼인이행의 차이를 의미하는 차별 혼인력을 분석함으로써 혼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부적 내용들을 담고 있다. 첫째, 인구학의 거시적 층위에서 최근 10여 년 동안 나타난 우리사회의 혼인 동향과 관련된 미혼율, 초혼연령, 혼인이행률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한다. 둘째, 개인적 수준의 통계분석에서 기존 연구가 주목한 바와 같이 교육수준, 취업여부, 직업형태, 급여수준 등과 같은 경제적 자원들이 혼인이행에 미치는 영향들을 분석한다. 여기서는 경제적 자원들 외의 근로시간과 부모로부터의 독립여부와 같은 미혼자들의 일상생활과 연관성이 큰 비경제적 요인들의 영향들도 함께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개인수준의 분석들을 성별 및 연령 집단으로 나누어 실시하여 혼인이행의 집단 별 차별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기존의 초혼연령, 혼인율 등 단편적 분석을 넘어 우리나라 혼인 경향의 변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개인수준의 혼인이행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혼인이행 결정 변인들에 탐색적 연구를 실시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분석들은 우리나라 혼인동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앞으로의 혼인관련 연구 및 혼인지원 정책 개발에 기초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II. 우리사회의 혼인 변화추이 분석

우리나라의 혼인(초혼) 현상의 변화 추이는 혼인연령의 증가와 미혼자 비율의 증가로 요약할 수 있다. 통계청의 혼인통계결과 발표를 보면 2000년부터 2010년 사이의 초혼 연령은 남성의 경우 만 28.8세에서 만 31.3세로, 여성의 경우는 만 26.0에서 28.4세로 각각 2.6세와 2.4세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남녀 초혼연령의 차이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약 2.8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인데, 이는 동갑 부부와 여자 연상 부부의 증가추세에 비춰볼 때 매우 특이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모순적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해당 기간 동안 매우 낮은 연령의 외국인 신부와 높은 연령의 내국인 신랑이 결혼하는 국제결혼이 증가에서 비롯된다. 혼인 통계 결과에서 내국인의 초혼만을 대상으로 범위를 좁히면 같은 기간 동안 남성은 거의 같은 수준의 평균 초혼연령 증가를 보이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초혼연령이 2.7세 증가하여 약 0.3년 더 높은 증가추이를 나타낸다. 이는 국내 여성의 혼인연령 증가가 남성의 그것에 비해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여성의 혼인력 저하 경향이 더욱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 성별 혼인형태별 초혼연령의 증가 추세

	모든 결혼		내국인 혼인	
	남	녀	남	녀
2000 ^a	28.8	26.0	28.7	26.0
2005	30.4	27.2	30.3	27.4
2010 ^b	31.3	28.4	31.3	28.7
차이(b-a)	2.6	2.4	2.6	2.7

자료: 통계청 혼인통계(각년도).

초혼연령의 증가와 더불어 미혼자들의 비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인구센서스 통계를 사용하여 산출한 연령별 미혼율 증가 추이를 보면, 지난 1980년과 2010년 사이 30년 동안 남녀 모두에서 미혼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2000년과 2010년에서의 미혼율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는 1990년대 후반 소위 IMF경제 위기 이후의 사회적 변동의 결과가 구조화되고 있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10년은 2008년 세계금융 위기에서 비롯된 경제적 충격이 있었고,

이로 인한 2009년 혼인의 급격한 감소에 대한 상승의 기저효과가 나타났던 시기라는 점에서 심각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2000년과 2010년 사이의 미혼율의 증가 경향을 연령별로 나누어 자세히 비교해보면 남녀 간의 다른 패턴이 발견된다. 남성의 경우에는 30대 초반 연령 집단에서 미혼자 비율이 가장 높게 증가하였으며, 여성의 경우에는 20대 후반 그룹에서 미혼율의 증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에는 연령별 미혼율의 증가가 여성에 비해 비교적 고르게 나타났으며, 여성과는 달리 30대 중반과 40대 초반 남성의 미혼율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증가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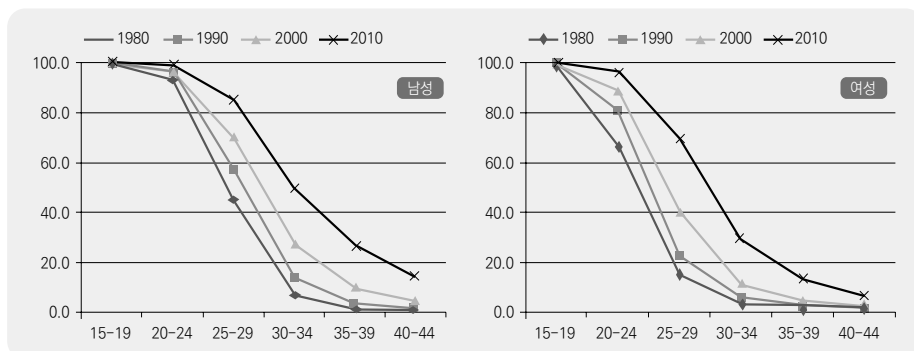
가장 최근 자료인 2010년 미혼율의 연령별 분포에서도 남녀 간의 미혼율 분포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남성의 경우에는 2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연령진행에 따른 미혼율 감소의 기울기가 비교적 큰 변화 없이 이루지는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사이에서 빠른 감소를 보인다. 이에 따라 남성의 경우에는 40대 초반에서도 비교적 높은 수준의 미혼율이 나타나지만, 여성에서는 30대 후반 이후에서는 낮은 미혼율을 보인다.

이는 여성의 경우에는 혼인 연령에 대한 심리적 한계 기준, 다시 말해 ‘미혼 기간이 특정 연령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사회 규범이 존재하고, 이것이 여성들에게 상당 부분 내재화 되어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비록 그러한 미혼에 대한 ‘한계연령 기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뒤로 미뤄지는 경향이 나타나지만, 혼인 연령에 대한 한계 기준은 여전히 유의미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남성의 경우에는 혼인연령이 여성에 비해 높을 뿐만 아니라, 미혼 ‘한계 연령’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여성들에 비해 관대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2000년과 2010년 사이 남성 미혼율의 증가 패턴에서도 다시 확인되는데, 30대 후반과 40대 초반 고령 연령집단에서의 증가폭이 30대 초반에 비해 그리 낮지 않았고, 같은 연령대의 여성들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수준의 증가를 보였다.

혼인연령의 분포를 살펴보면 우리사회 혼인에서 남녀 간에 다른 연령 기준이 작동하고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다. 2000년과 2010년에 결혼한 모든 초혼자들의 연령분포를 비교하여 보면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들이 발견된다(그림 2). 우선 2000년 초혼의 주연령집단은 남성의 경우에는 출생아수가 매우 많았던 1970년대 초반에 출생한 집단이기 때문에 2010년 초혼 건수 규모는 상당 수준 감소한다. 그리고 분포 그래프의 전체적인

모양을 보더라도 2000년에는 최빈값(mode)에 집중되는 높은 첨도의 분포를 그리지만, 2010년에는 그 첨도가 그리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성별 미혼자 비율 증가 추이(1980~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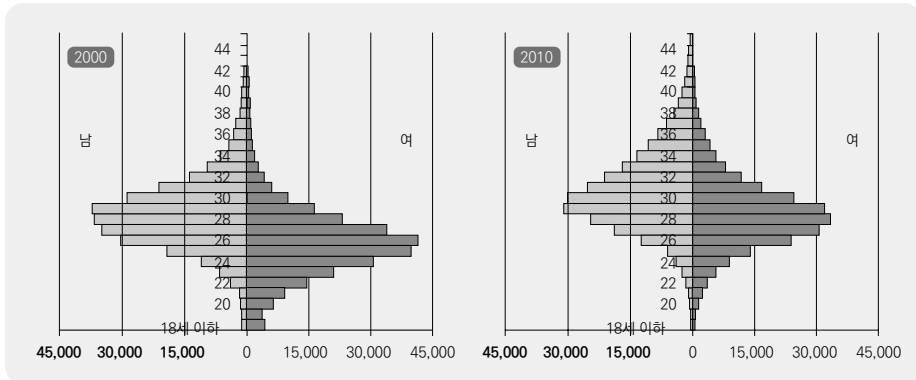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각연도).

한편 주혼인 연령층이라고 할 수 있는 초혼연령의 최빈값을 살펴보면, 2000년과 2010년 사이 평균 초혼연령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경우에는 초혼연령의 최빈값이 두 해 모두 29세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 초혼의 경우에는 만 26세에서 28세로 증가하였다. 초혼연령의 최빈값을 기준으로 주혼인연령 집단의 연령분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2000년에는 최빈값인 29세를 기준으로 이보다 어린 3개 연령집단(26~28세)에서는 초혼 건수가 10만 2천 건 수준으로, 이보다 나이가 많은 3개 연령집단(30~32세)의 초혼자 수 6만3천명을 크게 압도하였다. 그러나 2010년에는 최빈값보다 어린 3개 연령집단은 5만5천여 건, 그 반대 경우는 7만6천 건으로 그 크기가 역전되었다. 이러한 역전추세는 분석 범위를 최빈값 주변 ± 3 세가 아닌 18세에서 44세로 확대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초혼 연령의 분포는 특정 연령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미혼 ‘한계 연령 규범’이 남녀 모두에서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경향은 남성에게 더 먼저 나타났으며, 여성들에게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강한 규범으로 남아있기는 하지만 여성에 있어서도 빠르게 약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속적인 초혼연령의 증가와 이미 시작한 여성의 초혼연령 분포의 변화가 보여주듯이 혼인연령 규범은 앞으로

약화되거나 혹은 연기되는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유홍준·현성민, 2010), 이는 만혼 및 비혼의 경향을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그림 2. 성별 초혼연령 분포(2000년, 2010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2000/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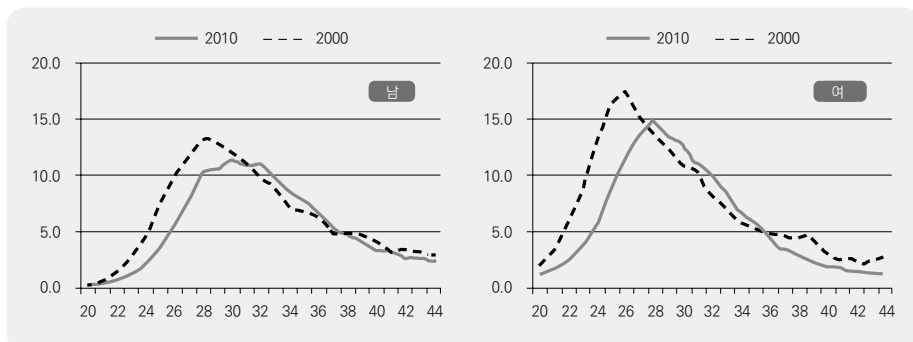
지금까지 미혼율과 초혼연령을 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 미혼에서 혼인으로의 혼인이행은 어떻게 나타날까? 혼인이행률²⁾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혼인이라는 위험에 노출된 모수인 연령별 미혼자 인구나 해당 연도의 혼인자들에 대한 자료가 동시에 필요한데, 국내에서 전체 미혼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는 센서스 자료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혼인이행률의 변화추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2000년과 2010년 센서스에 나타난 연령별 미혼자 통계와 해당 연도의 혼인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연령별 혼인이행률 산출해보았다.

우선 혼인이행률 분포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앞서 초혼자 분포와 유사한 형태가 나타는데, 여성은 남성에 비해 더 낮은 연령에서 최고점이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최고점의 연령은 앞서 살펴본 혼인 최빈 연령과 거의 일치한다. 그리고 최고점 이후 혼인이행률은 감소하는데, 이러한 혼인이행 확률의 감소와 혼인적령기라고 부를 수 있는 시기 이후 미혼으로 남아있는 인구의 감소가 맞물리면서 혼인적령기 이후 초혼건수 감소 추세가 더욱 빠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²⁾ 일반적으로 혼인율은 모든 인구 대비 혼인자의 비율을 의미하는 반면, 여기서 말하는 혼인이행률은 미혼인구 대비 혼인자의 비율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혼인율 대신 혼인이행률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렇게 특정 연령 이후의 혼인이행률이 감소하는 것은 수동적 혼인연기와 적극적 혼인 연기의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수동적 혼인연기란 특정 연령이 지나면서 혼인시장에서 상대 이성 미혼인구의 양적 축소(decrease in numerical mate availability), 혹은 혼인시장에서 혼인적령 규범 이후 연령자원(상대 이성의 선호)의 감소에 따라 혼인이행의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적극적 혼인연기란 이러한 혼인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신의 혼인을 적극적으로 미루거나 혹은 혼인을 포기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와 같은 설명들 중 잠재적 배우자 인구의 감소와 그로 인한 여성들의 혼인의 적극적 연기에 대한 설명은 혼인시장 이론(Marriage market theory)의 설명과 일치한다(Thornton et al., 1995; Lloyd, 2006).

그림 3. 연령별 혼인이행률의 분포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 통계청 혼인통계(각연도).

다음으로 2000년과 2010년 사이의 혼인이행률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분포 그래프가 전반적으로 우편으로 옮겨진 듯한 분포 변화를 찾아볼 수 있다. 이는 혼인이행의 최고점 연령이 더 높아졌다는 점과, 최고점 이전 연령에서는 혼인이행률이 감소하고 이후 일정 범위 연령에서의 혼인이행률 증가로 나타난다. 그러나 최고 혼인이행률은 해당 기간 동안 낮아졌음 또한 확인할 수 있는데, 남성의 혼인이행률의 최고치는 2000년 28세의 13.3%에서 2010년 30세의 11.4%로 낮아졌고, 여성은 26세 17.7%에서 28세 15.1%로 감소하였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남성의 경우에는 최고 혼인이행률이 낮아지면서 28세부터 32세까지 비교적 넓은 연령구간에서 혼인이행률의 차이가 크지 않은 형태로 분포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특정 연령에 대한 혼인적령기가

사실 상 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 역시 남성에 대한 미혼한계 연령 규범이 크게 완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혼인이행률 분포의 변화와 관련하여 또 다른 흥미로운 변화는 남녀 모두에서 30대 후반부터의 혼인이행률이 2000년에 비해 오히려 더 낮아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역전 양상은 36세 이상의 여성에게서 더 선명하게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39세 여성의 혼인이행률은 4.9%에서 2.6%로 거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여성의 만혼 경향, 다시 말해 고연령 미혼 여성집단에서의 혼인이행률이 과거에 비해 높아지고 있을 것이라는 일반적 인식과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이러한 추세는 고연령의 미혼여성에서 혼인을 사실상 포기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는데, 이는 국내에서도 앞으로 만혼화의 경향이 생애미혼율의 증가 및 나아가 미혼노인의 증가문제로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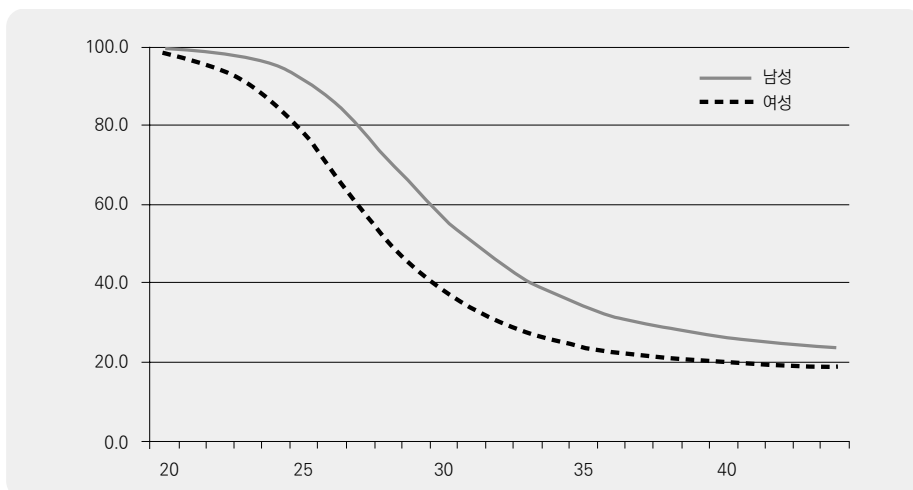
앞서 도출된 혼인이행률을 인구학에서의 생명표 기법에도 적용하여 미혼잔존율의 분포를 추산해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인구학 분석 방법은 미혼인구의 잔존이나 혼인인구의 혼인상태 증단을 그려보는데 적용되어져 왔다(Martin & Bumpass, 1989; Goldstein & Kenney, 2001; Preston et al., 2001). 여기에서는 20세 시작인구를 100.0으로 가정하여, 현재의 연령별 혼인이행률이 지속될 경우를 가정하여 가상의 코호트가 20세에서 44세까지의 미혼으로 남아있을 확률을 보여준다³⁾.

산출된 미혼잔존율 결과는 여성은 이십대 중반 남성은 20대 후반부터 미혼자의 수가 빠르게 감소하기 시작하다가, 이러한 감소세는 여성은 삼십대 초반, 남성은 삼십대 중반부터 완화된다고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하여 44세가 마치는 시점에는 남성은 무려 23.8%가 여성은 18.9%가 미혼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2010년 센서스 결과가 보여주는 44세 미혼자 비율, 남성 10.1%, 여성 4.6%를 크게 상회하는 충격적인 수치이다. 이 수치는 몇몇 방법론적인 한계들로 다소 과대 추정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인이행률의 반등 없이 현재의 혼인추세가 지속된다면 생애미혼율은 현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상승할 것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

3) 이 연구에서 사용된 미혼잔존율 계산방식은 모수인구와 사건발생 인구 사이의 측정 차이, 사망 및 국제이동이동이 반영되지 않는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생존확률(survival probability)을 제시하는 데는 분명히 정확성의 오류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혼인이행 추세가 앞으로 우리나라 인구 구성에 미치게 될 영향을 대략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 특히 지금까지 살펴본 우리나라에서 만혼의 경향, 20대 인구에서 나타나는 혼인이행률의 빠른 감소 추세 및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되는 30대 초반의 혼인이행률 증가, 30대 후반 이후 (특히 여성) 인구에서 나타나는 적극적 혼인 연기 및 혼인포기 증가 경향, 그리고 고연령대에서 더욱 심화되는 혼인시장 내 미스매칭으로 인한 성비불균형 등의 혼인력 감소추세를 고려해본다면 이 연구가 제시하는 결과의 장래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만은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림 4. 미혼 잔존확률 분포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2010), 통계청 혼인통계(2010).

지금까지 살펴 본 혼인동향 분석 결과는 미혼율의 증가, 초혼연령의 증가, 미혼 한계연령 규범의 약화, 30대 후반 이후 고연령 미혼자들의 혼인포기 경향, 그리고 앞으로의 생애 미혼자들의 빠른 증가 전망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경향은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된다. 혼인은 남녀 모두가 참여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여성들의 이러한 혼인력의 감소로 인한 초혼시장의 불균형은 새로운 형태의 혼인 동향을 유발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2000년대 들어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혼인형태의 변화들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여성 연상 부부의 증가, 남성 초혼-여성 재혼 혼인의 증가, 외국인 신부들과의 국제결혼 증가 등은 한국사회의 혼인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인구학적 구조의 맥락에서는 혼인시장의 불균형에 적응하는 새로운 형태의 혼인시장 적응전략이라고도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정책적 맥락에서 이상에서 기술한 우리사회의 혼인시장의 변화 동향은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우선 저출산 정책의 일환으로 혼인력을 높이려는 정책적 시도가 매우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금과 같은 혼인력의 약화 경향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출산력 감소 및 미혼노인 증가에 따른 노인부양 및 고독사의 문제 등이 심각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혼인력의 반등이 없는 출산력의 제고를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며, 이에 따라 출산지원 정책들의 효과도 시간이 지날수록 크게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혼인력의 제고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전체적 수준에서 혼인건수를 늘리려야 한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혼인연령을 낮추기 위한 시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후자는 혼인시기를 앞당겨 재생산 기간을 늘린다는 출산력 정책의 측면과 함께, 고연령 미혼자들의 증가에 따라 심화되는 혼인시장의 왜곡을 완화시켜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새롭게 인식되어야 한다.

혼인율을 높이고 혼인연령을 낮추려는 노력은 구체적 장애요인을 해소하려는 노력과 더불어 근본적인 환경조성을 위한 접근이 요구된다. 이는 혼인이행의 과정이 혼인 및 가족 구성 시기의 요인들뿐만, 그 이전의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 주거, 근로, 여가 등 다양한 영역들의 요인들이 복합되어 있는 종합적 생활영역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Ⅲ. 개인단위 혼인이행에 대한 통계 분석

1. 기존 연구 검토

혼인 경향 및 저출산 현상 따른 학술적·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이행에 관한 국내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우리사회의 혼인이행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혼인이행에 결정하는 요인으로 직업 및 교육 수준 등 경제적 자원에 주목하고 있다.

경제적 관점의 이론적 기초를 마련한 Becker(1974, 1991)의 이론에 따르면, 결혼은 개인이 혼인탐색(marital search)의 과정에서 어떤 사람에게 얻을 수 있는 결혼의 효용과, 미혼으로 남아있거나 혹은 다른 사람과 결혼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효용을 비교하여 이뤄진다. 이를 통해 그는 결혼 효용의 발생 원인이나 그 내용, 혼인시장에서의 공급과 수요 사이의 평형(equilibration), 결혼 효용 및 결혼성사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 등에 많은 관심을 쏟았다. 그러나 그의 이론이 결혼의 효용에 관한 논의에 천착하고 있지만, 그것이 경제적 효용만을 의미하지는 않다. 예를 들어 그의 이론적 논의에는 부모의 교육 및 소득수준, 형제의 수 등과 같은 가족 환경이나, 외국 출생 여부와 같이 적절한 짝찾기(mate selection)를 제약하는 요인들과 같은 비경제학적 요인들 역시 혼인이행의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설명한다.

또한 경제학적 접근은 여성의 경제적 독립성의 증가라는 측면에서 근대사회의 혼인력 감소 및 혼인연령의 증가 경향을 잘 설명해준다. 이 이론에 따르면 20세기 이후 나타나는 혼인력의 감소는 여성이 부인과 어머니라는 전통적인 역할에 대한 경제적 대안의 출현으로 인하여 혼인을 회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여성의 학력이나 경제활동 등 사회적 자본의 증가와 복지국가의 성장 등은 혼인에서 여성들이 얻을 수 있는 효용 수준을 감소시켰다. 그리고 여성의 교육 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 증가에 따라 여성의 혼인시장 내 교환 자본의 완성시기가 늦춰지게 되면서 혼인결정도 함께 미뤄졌고, 동시에 잠재적 배우자 남성들에 대한 기대 수준 역시 상승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Becker 1991; Moffitt, 1998).

국내에서 진행된 혼인이행 혹은 혼인의향에 관한 연구들은 경제학적 시각의 자원 효과에 기반 하여 논의를 이끌어 왔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자원 수준이 높을수록 혼인이

행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다수의 실증적 연구들은 혼인에 대한 경제적 자원의 영향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한다. 이들은 취업여부나, 고용상의 지위, 교육 수준과 같은 경제적 직업적 자원이 남성들에게는 혼인이행이나 혼인의향의 가능성을 높이지만, 여성들에게는 그 영향력이 유의미하지 않거나 혹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김정석, 2006; 우해봉, 2012).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자원의 영향력이 시기 및 코호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한다(박경숙 외, 2005; 유홍준·현성민, 2010).

혼인이행에 관한 국내 논문들은 경제학적 접근에 기반 한 개인적 접근에 집중되어 있다는 특징들이 발견된다. 이는 기존의 많은 연구들에서 혼인이행에 관한 결정변인으로 학력, 직업, 소득 등의 경제적 자원들 중심으로 혼인을 설명하려는 시도가 주류를 이뤄왔다는 것을 상기해보면 선명하게 드러난다. 혼인이행에 관한 기존 국내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성으로 정리될 수 있다.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분석의 범주가 개인들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적 자원의 교환이라는 측면에서 개인들의 특성을 다루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이다. 혼인은 가족을 구성하고, 앞으로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생애과정이기 때문에 수많은 특성들과 경험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러한 개인주의적이고 경제주의적 접근은 그 이론적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한계를 갖는다.

Becker의 이론을 보면 혼인은 가상적 혼인시장에서 혼인의 효용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혼인이 가능한 잠재적 배우자들을 찾는다고 전제하고 있다. 비록 경제주의적 관점의 연구들은 혼인 이전의 혼인탐색 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 논의를 하고 있지 않지만⁴⁾, 이 과정은 미혼자들이 배우자를 찾기 위해 지불하여야 하는 물리적 시간적 비용들을 필요로 하는 실제적 과정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혼인시장은 잠재적 배우자에 관한 정보가 완전 공개된 경쟁시장이 아니라는 점에서 합리적 선택성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하재경, 2007). 그러므로 상대 배우자로 하여금 혼인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경제적 자원뿐만 아니라, 더 많은 잠재적 배우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사람들은 자신

⁴⁾ 혼인이행에 대한 경제학적 설명들이 이러한 혼인 이전의 배우자 찾기 과정에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갖는 것은, 이들의 접근이 혼인결과 다시 말해 혼인의 성공이나 배우자 선택의 문제에 그 설명을 한정하는 경향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결혼의 심리적 측면들을 강조하는 연구들(예를 들어 Cate et al., 1986)에서는 혼인에 이르는 과정을 배우자에 대한 감정의 발전 과정으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이는 혼인이전에 이뤄지는 단계(dating)들의 중요성을 확인시켜준다.

에게 적절한 파트너를 찾기에 더 용이할 것이며, 이는 혼인이행의 가능성을 높이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개인주의적 접근들이 간과하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가족의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다. 혼인이전의 가족 경험은 혼인에 대한 자신의 가치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혼인결정 과정에도 분명히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한 예로 Michael & Tuma(1985)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학력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혼인이행의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부정적 가정환경에 처한 미혼자들이 가족 안에서 미혼으로 남아있음으로 얻을 수 있는 효용이 더 낮기 때문에 혼인 시기가 더 빠를 것이라는 Becker(1974)의 이론을 뒷받침해준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높은 혼인비용과 여전히 남아있는 가족혼의 경향으로 인해 가족의 영향이 서구와는 다른 방향으로 나타날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 조사결과에 의하면 2007년 이후 2009년까지 혼인자들의 평균 결혼비용은 남성의 경우 약 7,300만원, 여성은 3,260만원으로 나타났는데(김승권 외, 2009), 이는 젊은 연령의 미혼자들이 자신들의 근로소득만으로는 혼인비용을 감당하기 매우 어려운 현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로부터의 자원 이전은 혼인 비용 마련에 중요한 원천이 된다(이소영, 2011).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는 서구와는 달리 아직까지도 혼인이 가족 간의 연계라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가족의 경제적 자원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개인들의 혼인이행에 중요한 기제로 작용할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한편 비경제적 측면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도 혼인이행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자녀의 필요성이나 결혼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사람들의 결혼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진미정 · 정혜은 2010), 혼전동거나 독립거주에 대한 동의 정도가 높은 여성일수록 혼인의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정석 2006; 진미정 · 정혜은 2010). 그러나 흥미로운 사실은 최근의 만혼 및 비혼 증가의 경향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결혼과 관련된 성역할 규범의 수용이 전통적 방향으로 나타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최근의 경제적 어려움이 청년층 특히 여성들에게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 영역에서 안정성을 추구하는 전략이라는 측면으로 해석될 수 있다(박경숙 외, 2005; 진미정 · 정혜은, 2010).

한편 방법론적 측면에서 기존의 우리사회 혼인 패턴에 대한 실증적 연구들은 분석에 이용하는 분석자료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혼인통계나 센서스

자료를 통하여 혼인경향을 코호트 비교 등 총량적 관점에서 경향성 파악에 집중하는 방식이며(예를 들어 유홍준·현성민, 2010; 우해봉 2012), 다른 하나는 실제 혼인 여부가 아닌 혼인 의사나 혼인기대 연령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는 방식이다(예를 들어 김정석, 2006; 조희금 외, 2009; 진미정·정혜은 2010). 전자의 경우에는 연령의 진행에 따라 변화하는 개인들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특성들이 혼인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 반면 후자의 방식의 경우에는 실제 혼인이행을 대신하여 주관적 인식을 변인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혼인 경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한국의 혼인시장, 미혼자들의 생활 양태, 한국의 결혼 및 가족 문화는 서구의 그것과도 많은 차이를 갖고 있을 가능성도 매우 크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려는 시도는 학문적으로나 정책적으로도 중요한 함의를 제공하여 줄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연구는 기존의 논의들에서 중요하게 다루었던 경제적 자원들과 함께, 미혼자들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혹은 제약요인)과 가족의 특성이라는 점들에 주목하여 실제 개인 단위의 혼인이행의 차별성에 대한 통계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2. 분석 자료 및 분석 방법

이 연구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미혼에서 혼인으로의 혼인이행 가능성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 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 분석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t 시점에서 $t+1$ 시점 사이의 미혼에서 혼인으로의 혼인이행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연속된 시점의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패널 자료를 분석에 사용한다. 이 연구에서는 노동패널 자료를 사용하는데, 두 시점의 자료만으로는 혼인 사례가 매우 작기 때문에 통계 분석에 적절하지 않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패널 자료의 2001년부터 2008년 사이의 조사 자료를 통합하여(pooling) 분석에 사용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분석 단위는 해당 기간 동안의 개인기간(person period)이 되며, 각 개인기간은 t 시점의 개별 특성들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t 와 $t+1$ 시점 사이의 혼인이행 여부를 포함한다. 만약 t 시점의 개별 특성과 $t+1$ 시점 모두의 혼인상태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는 분석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⁵⁾

표 2. 분석 대상 변수들의 구성비율(%) 및 혼인이행률 분포

	남성		여성	
	구성비율	혼인이행률	구성비율	혼인이행률
전 체		6.6		7.9
연령				
20대전			18.1	4.1
20대후	45.4	6.0	60.0	9.6
30대초	39.2	7.7	18.5	6.7
30대후	15.4	5.5	3.4	4.8
교육(석사이상)				
고교졸 이하	9.0	2.5	1.8	6.5
고교졸	37.7	5.3	31.7	8.8
전문대졸	17.6	9.6	26.3	6.9
대학졸	32.2	7.5	38.0	8.3
석사 이상	3.5	7.8	2.3	2.7
직업형태				
무직	29.9	1.9	29.1	5.9
자영·가족	8.7	9.4	5.9	6.2
비정규	9.6	6.0	10.7	7.5
정규직	51.9	8.9	54.3	9.2
근로시간(피고용대상)				
40h 미만	5.7	4.0	10.4	12.0
44h±4	39.1	8.2	58.7	8.3
52h±4	27.6	11.1	18.6	10.0
56h 이상	27.4	7.3	12.3	7.6
부모학력				
대졸 이상	10.5	7.6	17.2	7.5
대졸 미만	88.8	6.5	82.3	8.1
모름	0.7	6.7	0.5	0.0

5) 그러나 t+1 시점의 자료가 누락(missing)된 경우에도, 이후의 혼인상태가 미혼으로 남아있을 경우에는 t와 t+1 사이의 개인기간이 분석에 포함되며, 혼인이행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정의된다.

	남성		여성	
	구성비율	혼인이행률	구성비율	혼인이행률
가족주거형태				
자가	56.2	5.8	66.5	7.6
전세	10.3	3.8	14.0	5.5
월세	5.0	3.1	4.4	7.5
기타	1.7	1.0	1.1	10.1
독립	26.8	10.5	14.0	11.8
	혼인 이행	비발생	혼인 이행	비발생
신장(Cm) 평균	172.9	171.7	160.0	160.0
월근로소득(만원) 평균	157.7	99.0	100.0	88.7

이렇게 추출된 개인기간들의 연령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 사건 발생 확률이 지나치게 낮은 연령 집단이 사건발생 확률 계산을 위한 모집단에 포함될 경우 전체적인 분석 결과를 왜곡시킬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며, 분석결과의 해석에 있어서도 현실적 혼인연령 범위를 넘어서는 집단을 포함시키는 것은 그 이론적·정책적 함의에 적절치 않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분석에서는 혼인이행 사건발생 확률이 2% 미만이 되는 연령 구간은 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를 통해 얻어진 분석 연령범위는 남자의 경우 만 26세에서 39세까지 이었으며, 여성의 경우에는 24세에서 36세까지였다. 그리고 추출된 자료들의 대표성 확보를 위하여 자료에 포함된 가중치를 반영하도록 한다.⁶⁾

분석은 혼인시장이 성별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을 분리하여 분석을 실시하고자 하며, 연령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인들의 영향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남성과 여성 집단은 다시 연령별로 구분되어 추가적으로 분석되어진다. 이러한 각각의 분석 결과들을 비교하여 성별/연령별 혼인이행의 확률의 차이를 살펴본다. 혼인발생의 가능성은 연도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연도를 통제변수로 분석에 포함하였으나, 그 값은 분석결과에 제시하지 않기로 한다.

⁶⁾ 이러한 가중치를 부여하였을 경우 사례수가 크게 증가하여 통계적 유의미도 검정이 크게 약화된다. 이는 변수들이 갖는 통계적 유의미도에 비해 R^2 의 값이 지나치게 낮게 나타난다는 점에도 드러난다. 혼인이행률이 그리 높지 않고, 혼인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들이 반복적으로 분석에 남게 되어 사건발생의 차별성을 떨어뜨리는 통합자료(pooled data)의 한계 속에서 가중치를 무리하게 낮추는 것은 변수들의 영향력을 과소하게 측정할 위험이 있다.

이 분석에 포함되는 변인들은 기본적 통제 변수들(연령, 교육, 신장, 부모로부터의 독립여부)과, 직업적 자원을 나타내는 변수그룹(소득, 직업형태, 근로시간), 그리고 가족의 배경을 반영하는 변수그룹(부모의 학력, 주거형태)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학력수준, 개인 소득, 직업형태, 정규직 여부 등은 개인의 경제적 자원에 관한 특성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근로시간과 부모 독립 거주는 비경제적 특성을 반영하는데, 이들은 잠재적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 정도를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 분석에 사용되는 개인기간들의 특성들은 <표 2>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남녀 간 혼인이행에 대한 가능성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남녀를 구분하여 혼인이행에 관한 위험분석을 3개의 분석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첫 번째 분석은 연령, 학력, 신장 및 독립여부에 대한 기본적 통제변수와 함께 직업변수 포함한 분석이다. 두 번째 분석은 근로시간을 포함하였는데, 피고용 집단(정규직, 비정규직)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마지막 분석은 가족 배경을 포함한 분석으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산 정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부모의 학력과 가족의 주거형태 변수를 포함하였다.

3. 분석결과 (전체 연령 혼인이행 분석)

우선 남성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가족의 특성을 제외한 전체 분석 대상에 대한 분석에서는 고졸 이하의 낮은 학력의 경우 혼인이행 가능성이 더 낮게 나타났다. 석사 이상의 고학력 집단의 경우에도 대졸 및 전문대 졸 학력 집단에 비해 혼인이행 확률이 다소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독립거주 집단에 비해 혼인이행 확률이 더 낮게 나타났는데, 직업형태 및 소득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의 영향력이라는 점에서 경제적 자원에 기인한 결과는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다. 개인의 외모 변인을 간접적으로 반영한다고 할 수 있는 신장은 혼인이행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통제변인들의 영향은 이어지는 취업자 대상 및 가족 특성 반영 분석들에서도 전체적으로 비슷한 경향을 유지하였다.

근로조건이 혼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소득이 높을수록 혼인으로 이행할 확률이 더 높았다. 고용형태에 있어서는 정규직의 경우 무직과 비정규직에 비해 높은 결혼 가능성을 보였으며, 무직과 정규직 간의 혼인이행 가능성의 차이는 매우 크게 나타났다. 자영업과 가족근로의 경우에는 정규직 피고용집단에 비해 더 높은 결혼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표 3. 혼인이행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분석결과 - odd ratio (남성)

	전체	취업자	전체
연령(30대 후반)			
20대 후반	1.325 ***	1.458 ***	1.308 ***
30대 초반	1.368 ***	1.558 ***	1.356 ***
교육(대졸)			
고교졸	0.675 ***	0.826 ***	0.706 ***
전문대졸	1.165 ***	1.301 ***	1.180 ***
석사 이상	0.899 ***	0.722 ***	0.855 ***
신장	1.008 ***	1.001 ***	1.006 ***
독립여부(독립)			
비독립	0.617 ***	0.717 ***	
월 근로소득	1.003 ***	1.006 ***	1.002 ***
직업(정규직)			
무직	0.341 ***		0.323 ***
자영·가족	1.184 ***		1.178 ***
비정규	0.841 ***	1.148 ***	0.884 ***
근로시간(56h 이상)			
40h 미만		0.829 ***	
44h±4		1.189 ***	
52h±4		1.423 ***	
부모학력(대졸 미만)			
대졸 이상			1.326 ***
모름			1.588 ***
가족주거형태(독립)			
자가			0.683 ***
전세			0.371 ***
월세			0.519 ***
기타			0.139 ***
R ²	0.093	0.058	0.099

피고용 취업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이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 본 취업자 대상 분석에서는 근로시간이 가장 긴 집단에 비해 그렇지 않은 집단에서의 혼인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근로시간이 지나치게 길 경우에는 개인의 여가 시간 축소 등으로 잠재적

파트너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제약되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근로 시간이 법정 근로 이하인 경우에는 오히려 혼인 가능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집단은 직업의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부모의 자원을 분석에 포함한 분석 결과에서는 부모의 자원이 많을수록 혼인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학력이 대졸 이상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은 혼인 가능성을 보였으며, 부모가 자가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독립을 제외한다면 주거형태에 비해 더 높은 혼인이행 경향을 보였다. 이는 남성의 혼인에서 부모의 자원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이 모형의 설명력이 첫번째 분석에 비해 매우 크게 상승하였다는 점 역시 이러한 경향을 다시 지지해준다.

그러나 자신이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모가 자가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보다도 높은 결혼 확률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독립거주가 보이는 높은 혼인이행에 대한 영향력은, 혼자 독립해 살고 있는 미혼 남성들은 앞서 근로시간과 마찬가지로 잠재적 파트너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다음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혼인이행 결과를 살펴보면 앞서 남성 대상 분석과는 일부 다른 패턴들이 발견되었다. 우선 연령의 경우 주 혼인연령대는 20대 후반에서 혼인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연령효과는 남성에서는 그만큼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학력의 영향력은 남성들과는 매우 다른 패턴을 보여주었다. 고졸 학력의 여성의 혼인 가능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원 이상 학력의 여성은 가장 낮은 혼인 가능성을 나타내었다. 이는 고학력 여성들의 혼인이행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신장의 영향력은 양의 방향으로 나타났다. 직업의 경우에는 정규직의 경우 가장 혼인 이행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규직과 무직 및 비정규직 간의 혼인이행 확률 차이는 남성에 비해 크지 않게 나타났다. 여성에게도 직업은 중요한 혼인결정 요인이지만, 남성만큼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근로시간을 포함한 취업자 대상 분석에서는 근로시간이 일정 정도 길 경우 혼인이행률이 높았던 남성에서와는 달리 여성에서는 근로시간이 짧을수록 혼인이행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특히 근로시간이 가장 낮은 집단에서 가장 높은 혼인이행 확률을 보여주었다. 이는 근로시간에 따른 잠재적 파트너를 만날 확률이 높아진다는 앞서의 설명을 다시 뒷받침해줌과 동시에, 혼인시장에서 남녀에 요구되는 직업자원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 4. 혼인이행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분석 결과 - odd ratio (여성)

	전체	취업자	전체
연령(30대후)			
20대전	0.949 ***	2.119 ***	0.944 ***
20대후	2.218 ***	4.126 ***	2.253 ***
30대초	1.549 ***	2.109 ***	1.571 ***
교육(대졸)			
고교졸	1.257 ***	1.148 ***	1.286 ***
전문대졸	0.797 ***	0.702 ***	0.795 ***
석사 이상	0.383 ***	0.290 ***	0.380 ***
신장	1.004 ***	1.010 ***	1.004 ***
독립여부(독립)			
비독립	0.561 ***	0.632 ***	
월 근로소득	1.002 ***	1.002 ***	1.002 ***
직업(정규직)			
무직	0.702 ***		0.702 ***
자영·가족	0.638 ***		0.629 ***
비정규	0.940 ***	0.847 ***	0.928 ***
근로시간(56h 이상)			
40h 미만		1.881 ***	
44h±4		1.152 ***	
52h±4		1.374 ***	
부모학력(대졸 미만)			
대졸 이상			1.036 ***
모름			0.000 ***
가족주거형태(독립)			
자가			0.592 ***
전세			0.397 ***
월세			0.663 ***
기타			0.788 ***
R ²	0.049	0.053	0.053

마지막으로 부모의 자원 배경이 미치는 영향력을 보여주는 분석에서는 대졸 이상 학력의 부모인 경우 혼인이행 확률이 높았다. 그리고 주거형태에 있어서는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 혼인이행 가능성이 가장 높았으며, 가족의 주거형태의 영향력 분포는 남성들에서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한편 여성의 경우에는 부모 자원을 분석 모형에 포함한 후에도 설명력의 차이에 큰 변화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부모의 경제적 자원의 영향이 남성에 비해 높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결과인데, 결혼과정에서 남성들이 신혼주택을 마련하는 현실과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분석결과 (연령별 혼인이행 위험 분석)

다음으로 혼인이행의 위험분석을 연령별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연령집단 구분은 혼인건수가 가장 많았던 연령을 기준으로 두 집단을 구분하였으며, 각각의 연령집단 분석에서는 전체 연령대상 분석과, 근로시간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한 피고용 취업집단에 대한 분석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남성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기본 통제변인들의 영향력은 앞서의 분석 결과와 비슷한 경향으로 나타났지만, 고연령 미혼집단에서 고교졸 학력 집단의 혼인이행 확률이 저연령의 같은 학력집단에 비해 더 높은 상대적 혼인이행의 확률을 보였다. 고연령 집단에서의 신장의 영향력은 저연령에 비해 현저히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조건의 영향력에 있어서는 직업형태는 두 연령집단 모두에서 비슷한 경향을 보였지만, 근로시간의 영향은 고연령 집단에서 더욱 선명하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 고연령에서 너무 길거나, 짧은 노동시간은 혼인이행 확률을 크게 낮춘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족배경이 미치는 영향은 두 연령그룹 모두에서 가족의 자원이 많을수록 혼인이행의 확률이 높았지만, 저연령 집단에서 가족 배경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자면 고연령 미혼 남성 집단에서는 개인의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학력과 신장의 영향이 약화된 반면, 근로시간의 여유와 가족배경의 자원이 미치는 영향력은 더욱 커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독립거주의 효과는 저연령 집단에서는 뚜렷하게 나타났지만, 고연령 집단에서는 그 효과가 크게 줄어들었으며, 자가나 전세형태의 거주로 부모와 동거하는 집단보다 혼인이행의 가능성이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독립거주의 효과가 고연령 남성에게서는 사라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표 5. 연령별 혼인이행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분석 결과 - odd ratio (남성)

	저연령 미혼		고연령 미혼	
	전체	취업자	전체	취업자
연령(20/30대후)				
20대전	0.824 ***	0.704 ***		
30대초			1.113 **	1.085
교육(대졸)				
고교졸	0.611 ***	0.726 ***	0.935 ***	1.139 ***
전문대졸	0.918 ***	1.058 ***	1.701 ***	1.748 ***
석사 이상	0.715 ***	0.520 ***	0.892	0.682 ***
신장	1.021 ***	1.015 ***	1.004 ***	1.000 ***
월 근로소득	1.003 ***	1.007 ***	1.003 ***	1.006 ***
직업(정규직)				
무직	0.310 ***		0.386 ***	
자영·가족	1.140 ***		1.346 ***	
비정규	0.873 ***	0.991	0.862 ***	1.001
근로시간(56h 이상)				
40h 미만		1.131 ***		0.404 ***
44h±4		1.123		1.271 ***
52h±4		1.314 ***		1.910 ***
부모학력(대졸 미만)				
대졸이상	1.244 ***	0.966 ***	1.267 ***	0.156 ***
모름	0.000	0.000	2.480 ***	2.226
가족주거형태(독립)				
자가	0.474 ***	0.615 ***	1.195 ***	1.261 ***
전세	0.217 ***	0.170 ***	0.723 ***	1.015 ***
월세	0.498 ***	0.291 ***	0.413 ***	0.753 ***
기타	0.000 ***	0.000 ***	0.644 ***	2.129 ***
R ²	0.129	0.097	0.107	0.124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령집단 간 비교 분석 결과는 <표 6>으로 나타내었다. 분석결과를 보면 저연령 미혼여성집단에서는 대졸자의 학력이 고졸이하보다 오히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석사 이상의 학력의 경우에는 그 사례수가 매우 적어 특별한 의미를

표 6. 연령별 혼인이행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분석 결과 - odd ratio (여성)

	저연령 미혼		고연령 미혼	
	전체	취업자	전체	취업자
연령(20/30대후)				
20대전	0.458 ***	0.555 ***		
20대후			3.625 ***	7.288 ***
30대초			1.677 ***	2.449 ***
교육(대졸)				
고교졸	1.466 ***	1.390 ***	1.194 ***	1.105 ***
전문대졸	0.973 ***	0.845 ***	0.620 ***	0.535 ***
석사 이상	0.000	0.000	0.345 ***	0.271 ***
신장	1.008 ***	1.000 **	1.000	1.009 ***
월 근로소득	0.999 ***	1.000 **	1.003 ***	1.002 ***
직업(정규직)				
무직	0.355 ***		1.311 ***	
자영·가족	0.778 ***		0.649 ***	
비정규	0.493 ***	0.468 ***	1.954 ***	1.726 ***
근로시간(56h이상)				
40h 미만		1.542 ***		1.872 ***
44h±4		1.023 ***		1.064 ***
52h±4		1.403 ***		1.053 -
부모학력(대졸미만)				
대졸이상	0.873 ***	1.125 ***	1.245 ***	1.189 ***
모름	0.000	0.000 -	0.000 -	0.000 -
가족주거형태(독립)				
자가	0.666 ***	0.763 ***	0.578 ***	0.707 ***
전세	0.252 ***	0.349 ***	0.523 ***	0.442 ***
월세	0.955 ***	0.710 ***	0.469 ***	0.447 -
기타	0.976 ***	1.309 ***	0.398 ***	0.000 ***
R ²	0.088	0.073	0.080	0.117

부여하기 힘들다. 반면 직업형태가 미치는 영향력은 저연령 미혼집단에서는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근로시간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가장 긴 집단에 비해 그렇지 않은 집단들에서 높은 혼인이행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집단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의 차이를 보였다는 점은 흥미로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단 법정근로 시간과 인접한 근로시간을 가진 미혼여성들에게는 혼인이행이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의 직업의 경우 근로시간의 차이가 직업의 특성에 따라 다른 함의를 갖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부모의 자원은 전반적으로 저연령 미혼여성의 혼인이행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경향은 고령 미혼여성 집단에서 발견된다. 대학원 이상의 높은 학력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혼인이행 확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도 매우 선명하게 나타났다. 직업형태에 있어서도 정규직 피고용의 경우 혼인이행의 가능성이 오히려 낮게 나타났으며, 심지어 무직이나 비정규 집단에 비해서도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직업 자원이 높은 여성이 혼인이행의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경제적 자원이 여성의 혼인이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존 연구의 결과들을 다시 확인해준다. 특히 이 연구의 분석에서는 이러한 부정적 영향이 고연령 여성들에게서 강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렇게 높은 자원 수준의 여성들의 혼인이행 확률이 더 낮은 것은 이들의 혼인기피 경향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직업 자원이 낮은 미혼여성들의 혼인이행이 더 용이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높은 자원의 고연령 미혼여성들이 혼인을 포기하는 경향이 고연령 미혼여성 집단에서는 발견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들의 혼인이행의 확률이 높다는 것이 혼인대상자의 특성을 설명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고연령의 고학력 여성의 혼인이행률이 낮은 것은 자신에게 적당한 배우자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고연령 미혼여성들에게서는 근로시간이 짧을수록 혼인이행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난다는 점도 매우 특이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고연령 여성들의 경우에는 저연령 여성들에 비해 가족 자원이 혼인이행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났는데, 특히 부모의 학력이 미치는 효과가 저연령 여성이나 남성들에 비해 매우 높았다. 부모의 주거형태와 관련해서는 자가 거주가 전세나 월세에 비해 혼인이행률이 높아지는 일정한 패턴을 보이면서 고연령 여성들의 혼인이행에 관한 부모의 자원 효과를 확인시켜 주었다. 독립거주의 효과는 두 연령집단 모두에서 나타났지만, 저연령 미혼 여성에게서 좀 더 강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신장이 미치는 영향은 고연령 남성집단과는 달리, 고연령 (피고용) 여성집단에서도 그 영향력이 여전히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IV. 결론

이 연구는 혼인과 관련된 다양한 인구통계를 이용하여 지난 10여 년간의 혼인 패턴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미혼자들의 혼인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분석하고자 개인단위 자료를 가지고 위험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혼인관련 인구자료 분석에서는 혼인 연령의 증가 및 미혼율의 증가와 같은 혼인력의 악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특히 2000년과 2010년 사이에 미혼율의 증가가 매우 극적으로 이뤄졌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혼인에 관한 연령구범의 악화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특히 미혼 '한계 연령' 구범의 악화가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에게서도 확인되었다. 혼인력의 감소는 혼인이행률 분포의 변화로도 이어졌는데, 혼인 최고 적령기의 혼인이행률이 낮아지는 가운데 전반적인 혼인이행 확률의 분포가 고연령 방향인 우측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흥미로운 사실은 최근 삼십대 후반 이후의 혼인이행률이 과거 10년 전에 비해 오히려 더 감소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고령대의 적극적 혼인 포기가 크게 증가하였음을 의미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여성에게서 더 선명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만혼 및 혼인이행률 감소의 경향은 앞으로 우리사회의 혼인력이 더욱 크게 악화될 수 있음을 반영하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는 출산력의 추가적 하락은 물론이고 생애미혼율의 상승으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들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개인단위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혼인이행의 차별적 분포에 관한 통계분석에서는 전반적으로 경제학적 설명, 다시 말해 혼인자원의 혼인이행에 대한 긍정적 효과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직업 자원과 관련하여 취업/정규직으로 대표되는 직업의 안정성과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결혼을 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혼인이행의 차이는 저연령 여성에게서 더욱 선명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고연령 여성들 사이에서는 그 경향성이 오히려 역전되는 모습이 발견되었다.

학력의 경우에는 여성에 비해 남성에서 그 영향력이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났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그 영향력이 남성에 비해 높지 않게 나타났다. 대학원 이상의 고학력 결혼 가능성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심지어는 고졸 이하의 학력집단보다도 낮았다.

학력 및 직업자원 이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변인들과 관련해서는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 혼인이행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소득 및 직업 안정성을 통제한 이후에도 나타난 결과라는 점에서 경제적 자원의 관점에서는 설명될 수 없는 경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근로시간이 긴 경우는 혼인이행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연령 집단에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근로시간이 미치는 영향력에는 성별에 따라 다소 상이한 패턴을 보이고 있었는데, 여성에게서는 근로시간이 짧을수록 혼인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현상도 나타났다. 부모의 자원과 관련해서는 자원 수준이 높을수록 혼인이행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경향은 여성보다는 남성에서, 저연령집단보다는 고연령집단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들은 이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중요한 시사점들을 제공한다. 첫째, 우리사회에서 혼인에 관한 규범은 빠른 속도로 약화되고 있으며, 이는 초혼연령의 증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혼인이행률의 감소로 이어졌다. 이는 향후 혼인력의 반등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우리사회의 혼인력이 크게 감소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더불어 정부의 혼인지원 정책이 혼인 장애요인 감소를 통한 혼인이행 지원 정책 뿐만 아니라, 혼인연령을 낮추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력히 시사한다.

둘째, 혼인이행 분석에서는 경제적 직업적 자원은 혼인이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에는 틀림없으나 그 영향의 방향성이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으며, 성별이나 연령 혹은 다른 특성들에 따라 상이하게 발현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Becker의 경제자립가설(economic independence theory)을 확인해주는 동시에, 한국의 혼인시장에서 여성에 대한 혼인시장 이론(marriage market theory)의 설명 가능성도 뒷받침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다시 혼인이행이 미혼과 결혼이라는 이분법적 결과가 아니라, 분절된 매칭의 장(혼인시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자원적 관점에서 혼인이행에 접근하는 것은 뚜렷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을 것이며, 더욱 복잡한 설명 프레임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자원 수준이 높은 고연령 여성 집단에서는 자원이 오히려 혼인의 가능성을 낮추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는 혼인을 통해 지불하게 되는 기회비용이 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개별적 매칭의 개념보다는 혼인문화, 가족문화, 성별역할과 같은 사회 문화적 요인들이 반영된 구조적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셋째, 이 연구는 부모 독립 여부와 근로시간이 미치는 영향에서 나타나듯이 경제적 자원만으로 혼인이행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혼인이행은 단순히 자원의 양의 관점에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 매칭 및 삶의 만족도 등과 관련된 복합한 현상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는 직업적 경제적 자원을 지원하는 것만으

로는 정책적 성과를 거두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며, 일상생활 및 여가 등 생활과 관련된 질적 요인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미혼의 청년들의 독립을 촉진 시킬 수 있는 지원 방향에 대해서도 정책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미혼 일인가구에 대한 주택보조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신혼 부부 주택지원 정책보다 적은 비용을 가지고 높은 혼인력 기여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족 자원의 영향에서 알 수 있듯이 혼인이행을 개인의 특성만으로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가족을 중시하는 우리의 혼인문화에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지만, 더불어 혼인비용을 미혼의 청년들이 홀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으로도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혼인에 대한 분석 단위는 서구의 연구에서와 같은 개인적 요인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문화적 경제적 특성들을 반영하는 접근 프레임의 개발이 요구되어진다. 더불어 정책적 맥락에서 전반적인 혼인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편으로는 혼인지원 정책이 가족정책의 맥락에서 수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자녀들의 혼인비용 문제는 부모들의 노후와도 직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지적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혼인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보고자, 실제 혼인이행에 관한 위험분석을 탐색적으로 실시하였다. 이 연구는 분석결과들을 국내외 학계에서 축적된 혼인 및 혼인시장에 관한 연구들과 종합하는 본격적 이론적 정교화 작업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변수 구성과 가중치 부여에 있어서도 좀 더 정교한 조작화 과정이 필요하며, 특히 변수 및 분석 모형 구성은 한국적 이론화를 위한 프레임 설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방법론적 측면에서도 가중치 부여에 따른 유의미도의 과대 측정 등의 문제가 있다. 그러나 분석결과들의 방향성 및 기존 연구와의 일관성들을 고려할 때 국내 혼인이행에 관한 탐색적 연구로서 갖는 연구 성과를 기각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연구의 분석은 각 연도별로 분리된 관찰치(observation)들을 통합된(pooled) 형태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공통된 응답자에서 추출된 개인기간들 사이에 내적 상관성(intra-correlation) 여부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채 단순 위험분석이 실시되었다. 이를 통제하기 위한 좀 더 발전된 형태의 분석방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가 제시하고 있는 다수의 발견들에는 지금까지 경험적 근거 없이 선형적으로 인식되어져 왔거나, 혹은 기존의 분석틀로는 발견되지 않았던 새로운 발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 연구가 앞으로 혼인이행에 대한 후속 연구 및 정책적 대응에 중요한 기초들을 제공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상림은 미국 유타주립대학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본부에서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출산, 혼인, 인구이동 분야이며, 현재 임신 전 출산건강 증진, 혼인정책, 인구구조 고령화와 인구이동 현상 등을 연구하고 있다.

(E-mail: silee@kihasa.re.kr)

참고문헌

- 김상미, 조영태(2011).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산모의 고연령이 영아 사망에 미치는 영향: 교육 수준을 중심으로. *보건과 사회과학*, 29(1), pp.69-97.
- 김상원, 이정주, 김지현, 이재희, 윤신원, 채수안, 외(2010). 우리나라 저체중출생아와 이에 관계된 인자의 변화양상, 1995-2007. *대한주산학회지*, 21(3), pp.282-287.
- 김정석(2006). 미혼남녀의 결혼의향 비교분석. *한국인구학*, 29(1), pp.57-70.
- 김태현, 이삼식, 김동희(2005). 출산력 저하의 원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총서 10.
- 김태홍, 김동식, 김은지, 배호중, 민현주(2011). 저출산에 대한 만혼의 영향과 정책과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대한민국 정부(2011).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11-2015.
- 박정환, 이주영, 박순우, 박성준(2004). 늦은 첫 임신이 저출생체중 및 조산에 미치는 영향. *한국모자보건학회지*, 8(1), pp.7-15.
- 변용찬, 김동희, 이송희(2010). 결혼형태 변화와 출산율의 상관성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우해봉(2012). 한국의 혼인과 출산 생애과정: 출생코호트별 및 교육수준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5(1), pp.151-179.
- 유홍준, 현성민(2010). 경제적 자원이 미혼 남녀의 결혼 연기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33(1), pp.75-101.
- 이삼식, 최효진, 오영희, 서문희, 박세경, 도세록(2010).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상림, 박종서, 안세아(201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저출산정책 연계방안.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소영(2011). 세대간 자산이전 측면에서 연령대에 따른 결혼시 주거자금 마련 변화추이.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9(1), pp.205-216.
- 은기수(1995). 결혼으로 이행에 있어서 연령규범과 순서규범. *한국인구학*, 18(1), pp.89-117.
- 조희금, 고선강, 여성연(2009). 결혼지연 요인에 대한 사회적 대응방안 마련.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 진미정, 정혜은(2010). 미혼남녀의 결혼의향과 결혼희망연령에 대한 가족 가치관의 영향 추세 연구: 2005년,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3(3), pp.31-51.
- 하재경(2007). 결혼 시장의 사회적 구성. *한국사회학회 정기학술대회*. 2007. 12.
- 황나미(2007). 가임기 여성의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생식건강 요인연구. *보건사회연구*, 27(2), pp.122-141.
- 홍성훈, 김윤진, 최형민, 정병준, 전명권, 이응수(2002). 35세 이상 고령산모의 임신과 출산의 최근 동향에 관한 임상적 연구. *대한산부회지*, 45(4), pp.549-553.
- Becker, G. S. (1974). A Theory of Marriage. Pp. 299-344 in Theodore W. Schultz (ed.), *Economics of the Family*, pp. Marriage, Children and Human Capital.
- Becker, G. S. (1991). *A Treatise on the Family* (2nd ed.).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Cate, R. M., Huston, T. L., Nesselroade, J. R. (1986). Premarital Relationships: Toward the Identification of Alternative Pathways to Marriage.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4(1), pp.3-22.
- Goldstein, J. R., Kenney, C. T. (2001). Marriage Delayed or Marriage Forgone? New Cohort Forecasts of First Marriage for U.S. Wome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6(4), pp.506-519.
- Lloyd, K. M. (2006). Latinas' Transition to First Marriage: An Examination of Four Theoretical Perspectiv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8, pp.993-1014.
- Martin, J. A., Bumpass L. L. (1989). Recent Trends in Marital Distribution. *Demography*, 26(1), pp.37-51.
- Michael, R. T., Tuma, N. B. (1985). Entry into Marriage and Parenthood by Young Men and Women: The Influence of Family Background. *Demography*, 22(4), pp.515-544.
- Miozzo, M., Simoni, G. (2002). The Role of Imprinted Genes in Fetal Growth. *Biological Neonate*, 81, pp.217-228.
- Moffitt, R. A. (1998). The effect of welfare on marriage and fertility. In R. A. Moffitt (Ed.), *Welfare, the family, and reproductive behavior*, pp.50-97.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Preston, S. H., Heuveline, P., Guillot, M. (2001). *Measuring and Modeling Population Process*. Oxford: Backwell.

Thornton, A., Axinn, W. G., Teachman, J. D. (1995). The Influence of School Enrollment and Accumulation on Cohabitation and Marriage in Early Adulthood.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0, pp.762-774.

Marriage Trends and Marriage Transition in Korea

Lee, Sang-Lim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Marriag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to explain the lowest low fertility in Korea where illegitimate births account for only 2% of total births. Nevertheless, marriage, particularly marriage transition from never married to married has been rarely studied in Korea.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investigate marriage trends and marriage transition patterns in Korea. For the purposes, this study conducts various demographic analyses on current marriage patterns at population level and statistical analyses on marriage transition at individual level utilizing data from the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between 2001 and 2008. The results of demographic analyses show the postponed marriages trends and the weakening social norm for marriage age particularly among single females, and the individual analyses reveal economic resource effects different by age and gender, and positive influence of parents' resource. The results also show that the probability of first marriage is likely to be decreased by long working hours and increased by residential independence from parents. This study demonstrates the necessity of marriage support policy to encourage marriages at younger ages and outlines future research agenda.

Keywords: Marriage Transition, Economic Resource Effect, Working Hours, Norm for Marriage Age, Marriage Market